

韓國經濟 發展過程에서 보인 傳統文化의 役割

田 宅 秀*

논 문 초 록 :

본 논문에서는 지난 30여 년간 한국 경제의 발전을 초래한 간접적 산업정책이 성공하게 된 이유를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경제적 설명을 보완하고자 한다. 고대 한국 사회에서부터 존재했던 공동체의식과 무속신앙에서 유래된 신바람 기질은 새로이 유입된 각종 외래문화를 한국 사회에 토착화시켰다. 조선 500년을 지배했던 유교문화도 이의 영향을 받아 극단적인 이상주의로 흐르게 되고 1960년대 이전까지 한국 경제를 지배했으며, 그 결과 1960년대 이전의 한국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부터 한국 경제는 경제중시사상과 경제발전에 친화적인 교육내용의 채택과 같은 일부 현실주의적인 요소를 받아들임으로써 전통문화와 어우러져 독특한 경제문화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위계질서상의 상위자가 제 공한 신뢰가능한 언약(credible commitment)을 형성시켜 간접적 산업정책에서 생기기 마련인 기회주의적 행동과 일반국민의 반발(voice)을 억제하였고, 제약된 합리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다.

핵심주제어: 전통문화, 경제문화, 경제발전
경제학문헌연보 주제분류: B1

I. 서 론

1962년부터 공업발전을 최우선 과제를 설정하면서 한국 경제는 급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정부주도의 개발정책, 외부지향적 발전정책, 그리고 성장제일주의 등으로 구성되는 경제정책의 추진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발전론을 연구하는 세계 경제학계에서는 한국 경제가 추구한 정책과 그 성과에 대해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를 보여 주고 있다. 첫째는 P.Krugman(1994)이나 A.Young(1994) 등이 보인 것과 같은 비판적인 견해로서 구 소련이나 동유럽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경제학 부교수

국가들처럼 현재의 성장이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H.Kahn(1979), A.Amsden(1989), R.Lucas(1993), World Bank (1993)의 견해처럼 신유교적 문화의 바탕 위에서 취한 정부의 선택적 간섭(selective intervention)이 경제발전을 촉진했다는 것이다. 이 두 견해는 한국 경제의 장래에 대한 방향제시라는 면에서는 서로 궤를 달리하지만 한국 경제가 이룩한 과거의 성과가 대단했다는 점에서는 서로 일치한다.¹⁾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는 한국 경제가 1962년 이후에 이룩한 성과가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는 왜 발생하지 않았는가이고, 둘째는 1962년 이전에 보인 한국 경제의 부진한 성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이다.

본 논문은 문화적 분석을 통해 이상의 두 의문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삼는다.^{2) 3)} 먼저 한국인의 전통문화 형성과정을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1962년 이전까지 한국 경제가 경험한 취약한 성과를 해명한다. 다음으로는 전통문화적 요소와 관련지어 현대 한국인의 경제문화적 특성을 추출하고, 이들 특성과 1962년 이후의 급속한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활동과 경제주체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규명할 것이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본 논문에서 발견된 결과가 제3의 후진국, 북한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의 장래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기로 한다.⁴⁾

1) 이 밖에도 Wade(1990), Evans(1995), Campos・Root(1996) 등의 많은 연구가 있다.

2) 본 논문은 문화가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 국한하는데, 사실은 쌍방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신제도학과 등은 주어진 환경인 문화가 수시로 변하는 경제를 규정한다고 보고 있으나, Marx나 문화적 유물론자 등은 하부구조인 경제가 상부구조인 문화를 변동시킨다고 보았고 Daniel Bell 등은 이를 지지하는 많은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필자(1997)의 논문 참조.

3) 경제이론이 미국의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데 80% 내외라는 Fukuyama(1995)의 조사, 한국이 채택한 간섭주의적 산업정책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모방할 수 없다는 World Bank(1993, chap.7)의 지적, 그리고 한국이 채택한 정책은 비전형적(atypical)인 경우가 많다는 Kahn(1979)의 지적 등을 해명하여 경제학적 분석을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한 것이지 기존의 경제학적 분석법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4) 이에 대한 필요성은 Lucas(1993), Amsden(1989)에서 제기되었음. "Korea's success on this struggle can be seen as a fascinating story in itself and as an example from which others may learn." Amsden(1989), p. 3 참조.

II. 한국인의 전통문화 형성과정

1. 유교 이전의 고유문화 특성

고대 한국인들은 단순한 일상생활 속에서 의식주의 해결에 관련되는 경제활동과 자연재해나 병마를 극복하는 문제에 주요 관심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의식주문제는 여럿이 한 곳에 모여 살면서 미작중심의 영농으로 해결하였고 자연재해나 병마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무속신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이후 원시유교, 불교, 도교 등이 외래로부터 유입되면서 이들은 전통적인 무속신앙과 습합되어 각자 독특한 형태를 갖게 되었다.⁵⁾ 이들 또한 시대의 변천에 따라 한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유교문화가 국가의 통치철학과 생활양식으로 확립된 조선왕조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유입된 많은 외래문화가 변형되어 한국적인 독특한 형태를 보이게 하는 요인으로 공동체의식과 무속신앙에서 나온 신바람 기질을 들고자 하며 본 논문에서의 논리의 전개에 필요한 만큼 약술하고자 한다.⁶⁾

첫째, 고대 한국인들은 일찍부터 내려온 미작중심의 정주농업에 적합한 공동체문화를 형성하였다. 미작농업은 영농방법의 성격상 대규모의 治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노동력을 일시에 필요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의 단합과 공동노동을 위한 공동체의 형성을 유도하였다.

공동체의 형성이 처음에는 가족중심으로 형성되었으나 점차 씨족중심의 부락단위로 확대되었다. 먼저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씨족공동체는 가문의 신분의식에 바탕을 둔 형식적 위계질서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연을 중심으로 하는 촌락공동체는 그 지역주민의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한 비형식적 평등관계를 형성하고 있다.⁷⁾ 이러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울타리 외부에 대해서는 서로의 협동을 바탕으로 폐쇄적이며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나, 조직 내부에

5) 종교학자 이능화에 의하면 무속사상이 부여, 동예에서 시작하여 신라시대에 와서는 일반대중 사이에 폭넓게 그리고 뿌리깊게 보급되었으며, 고려시대에는 모든 불교행사에 무속적인 요소가 자리잡았다고 한다. 무속신앙의 유래와 의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형효 외 (1994), pp. 62-64 참조.

6) 본 논문은 현대 한국인의 문화적 특징에 초점을 두므로 공동체의식과 신바람에 대한 상술은 피하기로 하며, 공동체의식에 대해서는 한상복(1982), 그리고 신바람 기질에 대해서는 김형효 외 (1994) 참조.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2권, pp. 750-754 참조.

서는 서로 갈등관계를 보이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한국인에게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동체의식은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보다는 조직을 생각하게 하고 집단의 연속성을 일깨워 의사결정의 지평을 넓혀 주기도 하였다.

둘째는 고대 한국인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한계를 인식하고서 각종 자연재해와 병마에 시달려 오면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무속신앙에 의탁하여 왔다. 무속은 무당을 중심으로 체계화된 종교현상이며 외래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한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조직적 형태이다.

무당은 무속의 종교적 제의인 굿을 주관하며 기우제의 사제기능, 治病의 기능 그리고 예언자적 기능 등을 행사하였다.⁸⁾ 무당이 이러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본인이 신들리고 이를 바탕으로 굿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신바람을 불러일으켜 혼연일체가 되도록 유도했다. 여기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주어진 여건이나 상황을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추론함이 없이 의도된 한 가지 국면만을 강조하면서 자기 생각에 도취되어 맹목적이고도 열광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⁹⁾

이러한 속성을 갖는 신바람 기질은 현대 한국인들로 하여금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일반생활에서도 비범을 추구하게 하며 특이한 결과를 이루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어떤 일에 일단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면 그 일의 성사를 위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근세에 유입된 기독교도 현재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데, 짧은 시간에 급속한 발전을 보인 저 밀바닥에는 무속적인 요소가 다소 깔려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무속신앙은 시대와 관계없이 한국인의 마음 밑바닥에 자리잡고 있으며 다양한 외래종교의 한국적 고유성을 특징지었다.

2. 유교문화 특성

유교사회라면 어디서나 나타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특성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¹⁰⁾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8권, pp. 207-216 참조.

9)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7) 참조.

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4) 참조.

첫째는 유교문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충효일치 사상이다. 효는 가정에서 그리고 충은 국가에서 일반국민의 행동원리를 규정하며 양자는 궁극적으로 서로 일치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의 연장자, 가정 그리고 국가가 요구하는 바를 준수해야 하며, 오늘날에는 국가나 기업을 하나의 확대가정(extended-family)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질서원리는 조직의 구성원들 사이에 상보성과 협력을 증시하는 계층구조(혹은 위계질서) 사회를 구축하였다.

둘째는 군왕 중심의 중앙집권제를 취하여 대부분의 의사결정권이 중앙의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농촌사회에서 국가 인력을 한 방향으로 동원하고 외침으로부터 안전을 유지하는 동원체제로 활용되었다. 오늘날에는 국가체제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조직이나 일반 민간인의 단체에서의 의사결정은 전반적으로 조직의 중앙에서 이루어져왔다.

셋째는 교육을 중시하는 사상이다. 가장은 가정을, 지배자는 국가를 현명하게 지배하기 위해서 스스로 배움을 습득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는 충과 효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간주하였다. 여기서 의미하는 교육은 명목적으로는 위기지학(爲己之學)이라 하여 군자라는 교육적 이상을 지향하나 실제로는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개인이 이룩한 입신은 부모와 조상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가족이나 가문에 의해 공유되도록 법적으로 인정받았다.¹¹⁾

넷째는 명분을 중시하는 문화이다. 사회의 지도자가 될 군자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길’인 義를 필히 갖추어야 했다. 그래서 의를 갖춘 이는 대소 간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利의 발생 여부를 고려하는 현실보다는 義라는 명분을 중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명분은 사람의 행동에 도덕적인 당위성을 부여하며 사회 질서를 확립시켜 주는 규범으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업제일주의 정신이다. 산업사회 이전에는 식량문제가 생존을 위한 핵심과제였으므로 농업을 중시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교원리는 기본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자연에 순응하는 산업인 농업을 중시하였다. 직업의 우선순위를 보면 문사계급이 제일이었고, 농업이 그 다음이었으며, 공업과 상업은 천시되었다.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등의 경제적 성과에 관심 있는 서양의 경제학자들은

11) 최봉영(1994), p. 501 참조.

이상의 특성을 동아시아의 유교문화권의 보편적 특성으로 간주하면서 이들 세 나라의 문화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특성은 한국이나 중국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의 구체적인 행동에서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연원은 이기동(1994)에서, 그리고 그 내용은 이현재(1994)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교 일반은 기본적으로 지배자가 국가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철학을 제공하는 학문으로서 맹자에 의한 성선설적 원리와 순자의 성악설적 원리로 구분되는 것이 보통이다.¹²⁾ 양자 모두는 학문의 출발점으로서 정신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 그 자체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맹자는 정신을, 그리고 순자는 육체를 중시하였다. 출발점에서의 이러한 차이가 인간의 행동과 사회질서 유지에 주는 함의에서는 더 큰 차이를 가져옴을 알 수 있다.

맹자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문화는 정신과 도덕이라는 이상을 지향하는 바탕 위에서 질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이상주의적 경향을 지향하였는데, 이는 한국에서 자리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본산지인 중국에서 보다 훨씬 발전하였다.¹³⁾ 한국 문화는 조선조부터 유교의 본산지인 중국보다 순수와 인본 등을 더욱 중시하였으며, 특히 정조 이후에 확립된 성리학은 한국 사회를 더욱 이상주의적으로 몰고 갔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추상적이고 엄밀하지 못한 행동을 보여 주변환경을 냉정하게 분석함이 없이 의욕과 독려로 의사결정한다. 또한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법규보다는 애매하고 측정불가능하며, 항상 변경가능한 명령을 선호한다. 이러한 특성은 현실적으로 주변환경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때로는 능력 이상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실과 이상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때에는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¹⁴⁾

12) 이러한 견해는 루신(1994), p. 69과 마오쥔젠(1994), pp. 251-257에 의해서도 공유되고 있음.

13) 맹자류의 이상주의적 유교문화가 한국에 쉽게 착근할 수 있었던 것은 순수성과 무정형적 감정표출을 내포하는 한국인 고유의 신바람 기질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추는 과거의 불교의 융성과 현대 기독교의 폭발적 성장의 이유에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14) 순자의 원리를 위주로 하는 문화는 법이라는 현실을 바탕으로 지향한다는 점에서 현실주의 문화로 이름지을 수 있고, 여기서의 구성원은 구체적이고도 규정된 행동을 보이며, 조직을 운영할 때에는 분명하고도 확정적인 법에 의존하므로 명확한 결론에 이르는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음. 일본 문화에서 나타나는 응용과 전문성의 강조는 순자의 원리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III. 1960년대 이전의 경제성과와 경제문화

1945년부터 1961년까지 17년간을 거치면서 한국 경제는 국민의 기본적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었다. 1954년 이전은 해방, 미군정, 정부수립, 6·25 동란 등으로 인해 매우 혼란스런 시기였다. 한국인이 주도적으로 경제를 운영하게 된 휴전 이듬해인 1954년부터 1961년까지의 경제성과를 볼 때, 국민총생산은 연평균 4.7%로 성장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1953년에 67달러이던 것이 8년간 15달러 증가하여 1961년에 82달러에 그쳤다. 같은 기간의 도매물가상승률은 연평균 18.5%에 달하고 실업률은 10%를 상회하였다. 그리고 수출과 수입은 각각 연평균 약 2,400만 달러, 3억 4,400만 달러를 기록하여 평균 3억 2,000만 달러의 지속적인 적자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경제의 발전사에서 보거나 당시 세계 각국의 경험과 비교해서 보거나 매우 취약하였다. 이나마의 성과도 연평균 총투자율 12.4%의 약 70%를 충당한 미국 원조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¹⁵⁾

Max Weber의 분석틀에 의거하여 당시 한국인의 경제문화가 전통문화의 전체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취약한 성과에 대한 부분적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시의 지도자들은 한국 경제의 능력이나 주변의 경제적 여건을 분석·고려함이 없이 세계적인 사조나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는 이상주의적 경향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제헌헌법과 제2공화국 헌법의 경제적 이념, 경제정책의 방향, 그리고 기업가와 일반개인의 경제행동에서 쉽사리 발견되고 있다.

제헌헌법에 반영된 경제개혁의 방향을 보면 자유시장 경제원칙, 노동자의 이익균점권과 생활보호권의 보장, 그리고 농업의 중시를 중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자의 경영참여권과 이익균점권의 보장을 헌법에 명시하였던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근로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였다고 볼 수 있다.¹⁶⁾ 당시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보장을 진정한 민족 자립으로 간주하고서 경제민주화의 원칙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 즉 자본축적도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의 지원여력도 없으며 기업의 경영상태도 취약하기

15) 변형윤(1987), pp. 34-40 참조.

16) 제헌헌법 제18조 참조.

이를 데 없었던 점을 무시하고 새로이 도입된 민주주의적 이상에 집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일제 식민지적 산업구조와 국내 경제여력의 허약, 그리고 경제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인 경제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화급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기응변식의 정책을 분야별로 추진하였다. 여전히 농업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공업정책에서는 균형성장을 추구하여 독자적으로 한국 경제부흥 3개년계획을 구상하였으나 빈약한 국내저축을 고려하지 않았다.¹⁷⁾ 이러한 생산적 정책의 허술한 집행에 비해 정부는 적산 불하, 원조자금 불하, PL480에 의해 도입된 농산물의 배급 등과 같은 변환활동에 치중함으로써 제도의 경직성을 증대시켜 국민경제의 쇠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¹⁸⁾. 또 다른 변환활동인 원조자금의 배분에서도 경제관료들은 정치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금의 배분에서 효율성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단기적 이기주의에 안주하고 있었다.

기업은 장기적인 생산투자보다는 배분활동에의 우선적인 참여를 통한 단기적인 이익에 치중하였다. 기업은 경제관료의 각종 변환활동의 상대자가 되어 지대의 분할을 놓고 협상하기도 하였다. 많은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특혜적인 은행융자나 외화대부를 사채시장에 다시 흘러 시세차익을 누렸다.

국민생산의 약 40%를 생산하던 농민은 빈곤한 도시민 위주의 농산물 가격 정책, 전비조달을 위한 통화팽창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 비료나 농기구 등의 농업 원자재 가격의 폭등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적자 속에 허덕였고 농가부채는 누적되어만 갔다. 그 결과 농민은 생산의욕을 상실하고 게을러져 자립의 의지 대신에 정부에 더욱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한국인은 높은 교육열을 보였으나 교육내용은 전통적인 선비교육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현실적이고 생산적이며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이념적이고 이상적이며 추상적인 것을 추구하였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당시의 한국 경제의 침체는 각 분야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요소가 경제발전에 장애로 작용한 점을 부인할 수 없다.¹⁹⁾ 한국 경제는 민주

17) 권영훈(1991), p. 152 참조.

18) Olson(1982)은 국민경제활동을 변환활동(transfer activities)과 생산활동(productive activities)으로 나누고, 현대국가의 부흥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생산활동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요인을 철폐하고 변환활동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19) 당시 한국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저개발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먼저 거시경제

주의와 시장경제원리에 놓여 있었지만 중앙집권적인 문화가 경제관료사회나 기업사회를 지배하였다. 국가지도자나 정치권은 국민경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는 커녕 오직 정치에만 관심을 갖고 경제문제를 정치적인 논리로 해결하려 하였다. 또한 경제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도 결하였다. 그래서 경제는 정치 안에 혼입되어 있어서 기업도 시장원리를 익히기보다는 정치논리를 따르기에 급급했다. 이는 P.Evans(1995)의 지적처럼 인도와 브라질이 낮은 경제적 성과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일치한다. 일반적인 한국인들도 농업을 중시하여 자연을 활용하려는 의지를 갖지 못했으며, 사농공상의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안주하였다. 그래서 당시의 한국인의 경제문화는 오래 전부터 내려 온 전통문화와 별 차이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IV. 현대 한국인의 경제문화

1962년 이후부터는 군사문화에 익숙한 새로운 국가지도자가 경제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문화에의 변화를 도모하였다.²⁰⁾ 이러한 가설은 한 조직의 지도자가 그 사회의 문화를 변동시킬 수 있으며, 후진국에서는 이를 위해 대항해야 할 외부의 적을 도입한다는 M.Casson(1995, ch. 7-8)의 지적과 일치한다. 당시의 국가지도자는 경제는 냉엄한 현실이라는 점을 깨닫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현실주의를 채택했다고 볼 수 있다.²¹⁾ 물론 문화는 속성상 장기간에 걸쳐 변한다고 하였지만 1962년을 전후한 정치·사회적 변동은 전 사회에 혁명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경제문화에도 많은 충격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공동체주의와 신바람 기질 그리고 보편적인 유교 특성이 맹자적인 이상주의적 문화 및 본격적으로 도입된 자본주의 문화와 어우러져 독특한 현대 한국인의 경제문화를 탄생시켰다. 이를 경제조직의 형태, 경제조직의 운영, 그리고 경제행위자의 자기관리 등의 세 측면으로 볼

정책, 수출정책 그리고 자원개발정책 등과 같은 공공정책을 실시하지 못했던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이는 World Bank(1993)가 『동아시아 제국의 기적(East Asian Miracle)』에서 지적한 점에 의해 역설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20) 군사문화에서는 군사적 특성상 현실과 주변 여건을 중시하며 철저한 위계질서하에서 목표 달성에 가치를 부여하며 업적과 실패에 대해 철저히 보상하는 경향이 있다.

21) 예를 들면, 경제발전을 위해 이전 정부에서 처벌받은 반민족 인사를 활용하고 부정축재자의 부를 투자로 유도하였으며, 일본을 경제발전의 협조자로 받아들였다.

수 있을 것이다.²²⁾

1. 경제조직의 형태를 규정하는 문화

(1) 강성 조직과 강한 지도력을 요구하는 문화

현대 한국인은 지난 고도성장기에 강력한 정부형태를 선호하여 중앙집권적인 정부의 운영방식을 추종하였으며, 응집력이 강한 기업조직을 선호하여 소유주 중심의 통제된 기업경영을 수용하였다. 그래서 국가의 최고지도자에게 막강한 힘이 모여지고 기업의 소유주 또는 최고경영자는 구성원들에게 제왕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일반가정에서는 가장이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적 속성의 원천은 신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절대적인 무당의 역할과 연결지을 수 있으며 그 정도는 유교적인 중앙집중적인 문화와 충효일치 사상으로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강력한 지도력과 강성조직은 구성원들에게 안정감(stability)을 부여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의사결정의 지평을 넓혀 준다. 즉, 시장 경제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단기지향형 의사결정을 억제하고 조직 전체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강한 정부는 해외시장에서의 기업활동에 대해 항상 뒤에서 지원함으로써 취약한 국내 경제에 대한 외국의 신뢰를 제고시키는 담보기능을 하여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였다.²³⁾ 그리고 강력한 조직과 지도력은 계층조직상의 하부기관으로부터 자율성을 유지하고, 신속한 결정을 도출하고 부족한 자원을 전략적인 곳으로 동원하며, 소수의 불만을 억제하는 데도 용이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효율상의 장점을 상쇄시킬 만한 단점도 아울러 내포하고 있다. 지나친 신속성은 경제의 일관성을 해쳐 경제활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나아가 경제주체 간의 신뢰도를 저상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의사

22) 한국 문화에 관한 기존의 문헌들은 한국 문화의 특성을 다양하게 나열하여 심지어 25개의 특성으로 제시하기도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를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7개로 체계화하는 동시에 각 특성의 경제적 의미, 그 역사적 연원, 실증적인 예, 그리고 이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밝혔다. 이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23) 나중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Amsden(1989)이나 World Bank(1993) 등은 한국 경제가 이룩한 경제기적을 한국 정부가 채택한 적절한 산업정책에서 찾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강력한 정부와 강력한 지도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결정권의 중앙집중화는 주변의 상반되는 세력의 견제를 받지 않아 독단적인 결정을 초래할 수 있었다.

(2) 온정적 위계질서 문화

위계질서는 명령을 내리는 상층과 이를 수행하는 하층으로 구성된 조직을 의미하며 정의상 자발적인 결사체이다. 구성원들 사이의 상하관계가 일단 확립되면 상위자는 가부장권적 속성인 권위와 和를 가지며, 하위자는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확립된 관계는 정으로 강화되며 공식적인 업무관계를 떠나서도 그대로 존속되어 서로서로가 가족 구성원의 감정을 느낀다. 특히 의사결정자는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둔 후 그에 대한 보상을 시혜의 기분으로 제공하고 실행자도 이를 가족 구성원의 기분으로 받아들인다.²⁴⁾ 이상에서 볼 때, 온정적인 특성은 기본적으로 혈연 및 지역중심의 공동체의식과 충효사상에서 나왔고 위계질서 문화는 군왕중심의 중앙집권적인 문화와 충효사상, 그리고 서열을 중시하는 유교적인 교육내용에 의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계질서 문화는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의사결정의 시계(time horizon)를 넓혀 줄 수 있다.²⁵⁾ 위계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외부의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고 지배자의 권위와 자체의 명령(fiat)에 의해서 운영되므로 경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이견이나 분쟁은 조직 내에서 협조적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에게 위험이 높은 미개척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기업은 하도급기업에게 특정 시설재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며, 구성원들에게 특정 분야의 기술을 연마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위계질서 문화에서는 협조를 중시하므로 수평적인 유인동기체제를 갖게 된다. 개별적인 업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 각자의 적절한 보상을 확인하기 힘들므로 유인동기의 힘이 대단히 약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경쟁이 피해지고 창의력이 저상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러한 조직하에서는 비용이 불필요

24) 정부는 기업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발전을 지향하는 국민의 여론과 기업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기업을 내부조직화하고 일반국민에게도 경제발전이란 명분에 호소하여 일반 사생활에 대해서 각종 요구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준 위계질서라 부른다. Lee(1996) 참조.

25) Williamson(1996) 참조.

하게 낭비되고 구성원들 간에 불합리한 관계가 존재함에 따라 조직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2. 경제조직의 운영을 규정하는 문화

(1) 법치 보다는 덕치를 중시하는 문화

경제활동에서만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반활동을 다스리는 질서원리로 법보다는 도덕을 중시한 것은 한국 사회의 독특한 특성 중 하나이며, 이것은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국가나 기업의 경제조직에서 지도자의 도덕성이 조직의 정통성을 결정하였다. 지도자는 먼저 훌륭한 도덕적 길잡이를 구성원에게 보여야 하며 덕을 통해 조직을 경영해야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따르며 각자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경향은 기본적으로는 맹자류의 이상주의적 문화, 명분중시문화, 그리고 추상적인 교육내용에서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도자는 주어진 규정이나 법보다는 자신의 명령에 따라 국가를 다스린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경영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형식적이고 구체적인 법보다는 의사결정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 외부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저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어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각자의 도덕수준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일처리가 상황에 따라 적당주의로 발전할 수 있고, 조직운영에서는 연고주의로 진행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일상인이 의사결정자가 되는 경우 국민의 지지를 받기 힘들며, 일관성의 결여를 초래해 조직의 신뢰도를 저상시킬 수도 있다.²⁶⁾ 더욱 위험한 현상은 덕치 중시의 문화가 때로는 경제활동에서 법이나 주어진 규칙을 의도적으로 경시하는 풍조로 변질되기도 하였다는 점이다.²⁷⁾

26) 특히 근래 도덕성을 표방한 정부의 인사정책, 경제정책, 사법정책 등에서 보인 무원칙성과 불일치성을 대표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

27) 그 내용은 법의 준수와 법의 집행으로 나누어 짚어 볼 수 있을 것인데, 법이 얼마나 지켜지지 않는지는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와 ‘법을 지키면 손해이다’에서, 그리고 법의 집행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은 ‘법이면 다냐’라는 말로 대표됨. 한편, 우리의 혼돈된 사고는 ‘우리 사회를 육법전서에 맡겨서는 아니된다’라고 주장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나 무질서를 도덕성의 타락으로 몰아 붙이면서 도덕성의 회복으로 해결하려는 데서 알 수 있다.

(2) 모험주의적 문화

모험주의란 경제활동에서 보편적인 경제이론을 따르지 않고 무모하게 밀어붙이는 경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²⁸⁾ 국가나 기업 또는 가게를 경영함에 있어서 경제적 지식이나 주변환경의 분석 등과 같은 인지적 요인에 기초하기보다는 지도자의 개성, 의지 등과 같은 가치적 요인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지난 30여 년간 한국경제는 ‘하면 된다’는 경험적 확신으로 충만해 있었다. 이는 이상주의적 문화의 바탕 위에서 ‘가난 탈피’라는 국민적 명분과 일로매진하는 신바람 기질의 상호 결합에서 연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일반기업활동에서 나타난 모험주의적 경향은 중앙집권적인 강력한 정부의 지원에 의해 강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모험주의적 문화는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하며, 강한 성취욕구를 지닌 사람으로 하여금 도전감을 주는 과업을 선호하게 하며, 그 과업의 성공을 위해 전력투구하도록 한다. 특히 신기술의 도입이나 새로운 시장의 개척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그 결과 한국 경제에서 실제로 기업주로 하여금 공격적인 경영을 하도록 하고 경제관료로 하여금 높은 경제적 목표를 세우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시장경제의 원리가 초래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가져오게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은 사회에서의 모험주의적 문화는 시장경제의 경쟁규칙을 무시하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하도록 조장할 수 있다. 또한 외형확장의 추구처럼 기업목표가 잘못 설정될 경우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안전불감증을 유발하여 안전유지비용을 더욱 증대할 수도 있다.

3. 개인 행동을 규정하는 문화

(1) 교육중시 문화

유교문화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교육열이 산업화시대인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으나 교육내용은 상당히 변하여 인적 자본으로서의 교육의 수단적 가치를

28) Hofstede(1997), pp. 109-116은 한국 문화를 생활 속에 내재해 있는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하는 지속적인 위협요인으로 느끼면서 높은 스트레스에 압도되어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 회피문화로 보고 있다.

중시하고 있다. 1962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시와 함께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기술교육이 중시되고,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의 응용분야의 인적 투자가 확대되었다.²⁹⁾ 이러한 교육열은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나타난다. 기업은 선진 경영기법이나 기술을 습득하도록 조직의 구성원들을 회사의 비용으로 장기간 외국에 보내거나 외국의 전문가를 기업에 초청하여 교육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국가 공무원을 업무의 연속이라는 차원에서 해외에 파견시켰다. 교육중시 문화는 전통적인 유교문화적 특성 중 하나이지만 교육열의 동기가 교육을 통해 사회적 인정을 받겠다는 의미에서는 명분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그리고 가문을 빛내겠다는 의미에서는 충효사상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육열이 지나치게 열렬하다는 의미에서는 신바람적 기질에 의해 더욱 증폭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의 효과를 보면 직접적으로는 신기술의 습득을 용이하게 하며, 습득된 신기술을 전사회적으로 확산시킨다. 이러한 효과는 외국으로부터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고 외국으로 새로운 상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제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부차적으로는 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화합적이고 순응하는 조직인으로 만든다. 이러한 화합·순응하는 기질 때문에 한국 경제가 정부나 기업수준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모험주의적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³⁰⁾

그러나 현재 주변에서 나타나는 지나친 교육열은 다소 병적인 것으로 보인다. 각종 시험열풍이 말해 주듯이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교육내용도 너무 수단적 가치로 경도되어 건전한 질서교육과 시민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다.

(2) 체면 중시의 집단주의 문화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시하여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적인 의를 앞세우는 행동양식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조직을 우선시하면서 조직 내에서 체면을 중시한다. 대인관계 측면에서 남이나 사회의 인정을 받는 것에 가치를 둬으로써 남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의식한다. 그래서

29)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7대 중점 목표의 하나로 기술계 학교수를 늘리고 학생정원도 대폭 늘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각 대학의 전공별 입학시험 점수를 보면 법학, 경제학, 경영학, 응용화학, 응용물리학, 건축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등과 같은 실천적인 응용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높은 점수가 나타나고 있다.

30) Cho(1991), pp. 559-560 참조.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행위의 결과에 따르는 실익의 계산차원을 떠나 예의·의리·인정의 정신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다. 체면중시경향은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려는 신바람의 기질과 도덕적 명분주의에 기인하며, 집단주의는 공동체의식과 농경문화에서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집단 내에서 체면을 중시하는 풍조는 높은 성취동기를 유발하여 어떤 일을 할 때 적극적이고도 열성적이게 하며 때로는 극단적이게 한다. 그리고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충돌할 때에는 조직의 구성원임을 일깨우면서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유도하여 국민의 역량을 한 곳으로 결집하는 데 강력한 힘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체면을 중시하는 풍조는 때로는 실제의 능력보다 훨씬 돋보이게 연출하도록 유도한다. 남들에게 보이는 외양과 겉치레에 치중하게 함으로써 과소비와 허례허식 등을 유발하며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도록 한다. 현대사회에서 더욱 부정적인 것은 개성의 발휘를 억제하여 창의력을 저상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3) 단기지향성의 문화

한국인은 어떤 행동을 실행한 후 그 결과를 금방 확인하고자 하며 스스로 기울인 노력에 비해 당장 무리한 성과가 발생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절차상 필요한 과정을 기다리기 싫어하며 어떤 행위의 결과도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한다. 여기서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향을 단기지향적 문화라 칭할 것이다.³¹⁾ 이는 감정을 무정형적으로 외부에 발산하고자 하는 신바람 기질에서 유래되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 내세를 중시하는 불교문화, 그리고 자연질서를 중시하는 유교문화가 장기를 중시하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인의 뿌리깊은 신바람과 친화적이지 못하여 한국 문화에 착근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³²⁾ 대신 상황적 요인이 한국인의 단기지향성을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31) Hofstede(1997), pp. 159-170은 한국인이 끈기, 위계질서의 존중, 검약 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한국 문화를 장기지향 문화라 분류하는데, 이는 경제적 의미의 장·단기 구분이라 볼 수 없다.

32) 생계유지에도 어려웠던 시절에 족보나 문집의 제작을 위해 수 세대에 걸쳐 저축하는 행위, 한 가문에서 정승을 내려면 3대에 걸쳐 적선해야만 한다는 사고 등을 보면 당시에 장기지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기서의 장기지향성은 혈연관계 내에서의 문제와 관계된 것이 특이하며 현재에도 가족문제에서는 장기적인 의사결정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는 본원의 민속학 전공인 장철수 교수와의 토론에서 지적되었다.

찾은 외적의 침입, 일제지배 등의 사회적 혼란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더해 단기적인 성향을 더욱 강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덕치를 바탕으로 한 중앙집권적인 국가·기업경영으로 말미암아 정책을 자주 변경한 것도 단기적 성향을 촉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단기지향성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높은 성취도를 갖게 하여 단기간에 높은 부를 소유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한국 경제로 하여금 높은 성과를 단기간에 이루어 개발도상국의 발전모형이 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때로는 정상적인 절차와 적절한 노력을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도록 부추기기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V. 한국의 경제발전에 미친 경제문화의 영향

1. 개별 경제주체의 행동에 미친 영향

(1) 경제정책 일반

정부는 경제가 이상이 아니고 냉정한 현실임을 인식하고서 불균형성장형을 기본정책방향으로 선택하였다. 진보적인 일부 지식인의 염원과는 반대로 연관효과(linkage effect)가 큰 선도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른 연관산업들을 끌어올려 국민경제 전반을 성장하도록 하였다. 농업부문에서의 절약을 공업부문에 투자하고, 공업분야 중에서도 처음에는 경공업, 다음에는 중화학부문, 현재에는 소위 첨단산업부문에 정부지원을 집중하였다. 여기에 동원된 자금은 각종 저축증대운동과 고물가정책을 통한 소비억제 등에 의해 조달되었다. 한편, 수입억제와 독점가격의 허용을 통한 내수회생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이 허약한 수출산업부문을 지원하였으며, 각종 노동운동을 억제하여 사용자 위주의 기업환경을 조성하였다. 이상이 말하는 간섭적 산업정책(interventionistic industrial policy)의 주요 내용이다.

간섭적 산업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동원된 제도적 지원과 정책의 내용은 각종 규제와 특혜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적 지원에서는 정부가 각종 인가나 허가를 통해 각 산업에의 진입과 퇴출을 결정했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순응하여 소정의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업의 설립을 허가하고, 부실기업의

특혜적 흡수를 제공하였으며, 종합상사제와 같은 일원화된 수출입창구를 인가하였다. 금융정책에서 보면 우선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에 대해서는 자금의 우선적인 배분, 장기간의 자금운용 허용, 저렴한 투자재원 조달로서의 저금리 적용, 환율의 저평가 유지 등을 들 수 있다.³³⁾ 재정정책의 지원내용을 보면 조세감면, 관세환급, 재정투융자 등을 들 수 있다. 수출상품과 그 원자재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간접세를 면제하고, 수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직접세를 면제하였다. 수출상품의 생산을 위해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수입관세를 환급 또는 감면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각종 규제와 특혜는 국민의 저항과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유발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과거 한국경제의 경험을 보면 세계의 여타 개도국들에 비해서 국민의 반발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한국 경제가 이룩한 성과를 기초로 한 사후적 판단에 의하면 각종 규제나 특혜가 정책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³⁴⁾ 경제관료 사회에서 기회주의적 행동이 심하지 않은 이유는 국가지도자가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성장의 필요성을 경제관료에게 확신시키고 개인적 업적을 국민경제의 성과에 연결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래서 경제관료의 등용이나 승진에서 철저하게 공적에 의존함으로써 관료들이 기업이나 정치권으로부터 독자성을 유지하였다. 교육을 중시하는 풍토에서 관료들도 대부분 공개적이고도 어려운 시험을 거쳐 선발되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해 정당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존경심을 받았다는 점도 중요하다. 경제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을 보면 위계질서를 중시하며, 그 내용에는 모험주의적 경향을 보였다고 말할 수 있다.

(2) 기업경영 일반

근대 경제발전에서의 중심적인 역할은 대개 기업에 의해 수행되었다. 한국에

33) 총대출금에서 차지하는 정책금융의 비중을 연평균으로 보면 1963-1970년에는 약 49%, 1971-1980년에는 약 62%, 1981-1985년에는 약 74%이며, 수출금융의 대출이자율과 일반대출이자율의 차이는 1960년대 5-20% 포인트, 1970년대에는 약 5-16% 포인트이다.

34) 때로는 정경유착에 의한 많은 부정부패행위가 국내의 신문에 보도되었으며, 우리 주변에서도 공무원의 부패행위, 기업의 반사회적 활동 등이 발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 사회가 총체적으로 부패했다는 자탄을 듣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서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경제발전을 연구하는 외국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과거에 관한 한 한국 경제의 성과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는데, 이를 고려한다면 그래도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서는 정부의 개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기업이 실제적인 주체의 역할을 하였으며, 경제규모가 커지고 경제구조도 선진국형으로 정착됨에 따라 기업의 역할은 점증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의 성장행태가 한국 경제의 발전과정을 잘 규정하므로 한국 기업의 경영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을 문화적으로 분석하면 될 것이다.³⁵⁾

첫째, 소유자 중심의 중앙통제적 경영체제를 보이고 있다.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소유와 경영은 일체화를 보이고 있다. 1995년 4월에 지정된 30대 재벌의 623개 계열기업의 현황을 볼 때, 대주주 및 그 가족이 평균적으로 43.3%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³⁶⁾ 이러한 현상은 비재벌 기업이나 중소기업 형태에서는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주식에서의 소유집중을 이용하여 경영 전반에 걸쳐 중앙집중적인 의사결정을 행사하고 있다. 경영에 관계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의 대부분은 소유주 자신 또는 그를 보좌하는 비서실이나 기획실에서 이루어진다. 이상의 특성을 초래한 문화적 배경을 보면 기업 소유주의 카리스마적 지도력과 견고한 조직체는 앞에서 언급한 조직의 형태를 규정하는 문화에 기인한 바 크다고 볼 수 있다. 온정적 위계질서 문화와 집단주의적 문화는 재벌 및 중소기업의 급속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 상급경영인과 중간관리자의 강한 몰입 정신과 헌신적인 노력을 초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국의 기업은 외형확장적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은 수익성보다는 매출액 증대를 통한 시장의 지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개의 주력기업을 거느릴 뿐만 아니라 주력기업과 무관한 기업을 계열화하는 비관련다각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오래 전부터 재벌의 비관련다각화 노력에 대해 세금 및 금융상의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재벌들은 제조업, 금융, 부동산, 수산업 등 전분야에 걸쳐 진출하고 있다. 1993년초 30대 재벌의 계열기업 수는 600여 개였는데, 1995년에 623개, 1997년 4월 현재 819개로 늘었다. 비재벌군의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중견기업의 경우도 어느 정도 규모에 도달하면 재벌기업의 형태를 모방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많은 재벌기업의 경우 정부의 정책이 아니고 기업 간의 경쟁심리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재벌기업들은 언론에 발표되는 매출액 순위, 수출실적 순위 등에 매우 민감하고 중견기업은 체면 때문에 계열기업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은

35) 한국 기업의 경영 특징에 대해서는 신유근(1992) 참조.

36) 강명현(1996), pp. 249-271 참조.

모험주의에 입각한 성취지향적 속성과, 체면과 가족을 중시하는 집단주의적 문화 속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한국의 기업은 단기적 성과를 추구하고 있다. 시장제도하에서의 경제운영은 기본적으로 경기의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업은 경제거래를 1회성의 경기로 생각하고 경기규칙의 준수 없이 목표를 달성한 이후 또 새로운 경제거래로 이전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생산활동에서 보면 외국으로부터 단순조립기술을 도입하고 임가공적인 생산방식을 동원해 대량 생산을 추구하였다. 판매활동에서 나타난 특징으로는 양위주의 푸시형 판매전략으로서 판매에만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판매를 촉진시키는 사후관리에는 무관심하였다. 수출에서는 현지국의 시장조사, 소비자동향 파악, 유통망의 체계적 관리 등의 시장중심의 마케팅활동을 소홀히 하였다.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서도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당장의 손익을 중시하였다. 이상의 경제행위는 안정적인 저수준의 수익보다는 위험성이 높은 고수익을 선호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의 모험주의적 문화를 반영한 것이다.³⁷⁾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던 것은 먼저 잘 짜여진 위계질서하에서 강력한 기업 소유주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있기 때문이며, 나아가 단기지향성의 문화가 이를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화는 당시의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은 가부장적 노사관계를 보이고 있다. 소유주 또는 경영자는 가부장권에 해당하는 경영권을 통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소유주는 기업을 대표하여 구성원을 지휘·감독하며, 구성원은 소유주를 일종의 가장으로 받아들여 지휘·감독에 복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소유주는 권위와 화로서 기업을 지배하고 구성원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노사 간에는 종속적 지배-복종 관계가 이루어지고, 중층적 수직적 관계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는 강한 지도자와 강한 조직을 선호하는 문화, 충효사상, 온정적 위계질서, 도덕에 바탕을 둔 권위주의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3) 개인의 경제행위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기에 접어든 이후 한국인은 근면·성실·절약을 최상

37) 물론 이러한 단기지향성은 잦은 정책변화로 인한 불확실성 환경하에서 산업정책이 제공하는 특혜적 유인에 최적으로 반응하려는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으로 발휘했다는 것은 공통적인 지적이다. 1990년대 한국인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4일을 초과하여 월평균 20일 내외의 선진국에 비하면 훨씬 길다. 뿐만 아니라 주당 근무시간도 제조업의 경우를 보면 1975년에 50.5시간으로서 40시간 전후한 일본, 미국, 유럽 국가에 비해서 길며, 1984년의 경우는 54.3시간으로 오히려 늘어나 대만과 싱가포르의 44.8시간과 48.6시간보다 짧다.³⁸⁾ 1962년에 11%를 보였던 한국인의 저축률은 그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62년부터 매 10년마다 연평균 13.8%, 22.2%, 34.2%로 되어 한국은 세계적인 고저축률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저축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조사대상자의 57%가 근검절약을 들었다.³⁹⁾

한국인이 이처럼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것은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거나 장래의 소비지출을 충족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이다.⁴⁰⁾ 많은 경우 자식의 교육을 통해 가문을 번성시키고자 하는데, 이는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왕성한 국내투자의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가가 각종 강제적인 저축증대정책으로 국민을 유도한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는 강한 정부와 강력한 지도력에 순응하는 문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인은 사회적인 지위상승에 대해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기업 내에서는 관리직을 선호하고 육체적 노동력을 요구하는 과업보다는 정신적인 노동을 선호하며 상부에서 지시하기를 선호한다. 그리고 타인 밑에서 임금노동자로 고용되기보다는 무리를 해서라도 독립적인 기업소유자가 되기를 원한다.⁴¹⁾ 이러한 현상은 체면 중시의 문화와 모험주의적 문화에서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2. 경제주체 간의 관계에 미친 영향

한국 경제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부조직화되어 있는 경제조직은 물론이

38) 1994년에는 47시간으로 줄어들어 싱가포르나 대만과 비슷하게 되었으나 아직도 40시간 이내인 선진국과 비교하면 장시간 일한다고 볼 수 있다.

39) 한국은행(1991) 참조.

40) 1991년 도시가구의 저축목적을 보면 자녀교육비 마련이 31.4%로 제일 높고, 주택마련이 27.7%로 두 번째이다. 한국은행(1991) 참조.

41) 이는 비농림어업에서 가족을 포함한 자영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에서 잘 나타나는데, 1992년에 한국의 경우는 23.2%인 데 비해 일본 13.8%, 미국 5.4%, 독일 6.9%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거니와 독립적인 조직 간에도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준내부조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가조직에서 보면 지도자-관료-국민으로, 경제주체의 관계를 보면 정부-기업-개인, 기업 간에는 대기업-중기업-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각각은 정의상 서로 독립적이다. 그러나 상호간의 역학관계 때문에 또는 이해관계 때문에 밀착된 준내부화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의 당근과 채찍이라는 정부의 전략에서도 부분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이를 가능하게 한 문화적 배경을 무시할 수 없다. 즉, 조직의 구성원들은 덕을 갖춘 유능한 강성 지도자를 추종하며, 위계질서 내에서 각자의 본분을 지키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집단주의 문화도 빼놓을 수 없다. 또한 교육의 내용도 이를 반영하여 조직 내에서의 순종을 중시하는 것이며 각종 임용·입사·자격시험은 위계질서 조직관계를 더욱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⁴²⁾ 이는 한국경제를 구성하는 각급 조직 간의 관계를 자세하게 보임으로써 더욱 분명하게 논증될 수 있다.

(1) 정부-기업관계

정부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권력과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에 대해 수직관계 구조하의 비공식적 다중부서형(multi-divisional firm)을 형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기업의 영향력에 대해 독자성(autonomy)을 유지했다. 국가지도자나 경제관료들은 기업에 미치는 경제정책의 내용과 그 효과를 미리 그리고 독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책집행상 생기는 지대의 분배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는 청렴함과 공적에 입각한 인사정책을 보임으로써 경제관료로 하여금 전문가로서 내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적인 지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⁴³⁾ 동시에 정부는 기업사회에 혼입(embedded)되어 있어서 양자 사이의 제도적 관계는 끈끈하여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었다.

양자 사이에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국가지도자와 경제관료 그리

42) Campos · Root(1996), pp. 56-60 참조.

43) Evans(1995)는 한국을 성공적인 발전국가의 구성체로 보고, 한국의 경우 내부조직은 업적주의와 내적 일관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자율적(autonomous)이고, 국가-사회관계는 신속하게 변화하며 강건한 제도적 관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밀착적(embedded)이라고 하였고, 브라질의 경우 정부는 이익집단인 대규모 농업가의 영향하에 놓여 있으며 제도적인 변화를 도모하기에는 너무 허약했다고 봄.

고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월례수출확대진흥회의와 같은 각종 조정위원회(deliberation councils)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⁴⁴⁾ 위원회에 참석하는 구성원들은 법적인 관계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명령(fiat)과 민간기업의 순응(compliance)에 의해 결합되었다.⁴⁵⁾ 각 조정위원회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공장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보고하는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인 효율성을 높여 주었다. 부수적으로는 국가지도자가 이미 설정된 목표의 수행 정도를 파악하며 경제관료의 업적이나 업무자세를 감독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기업에 대한 정책의 신뢰성을 높였다. 그리고 이 자리는 목표달성에서 생기는 성과를 각 기업에게 업적에 따라 또는 정부정책의 순응도에 따라 공개적으로 배분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부 관료와 기업의 야합에 의한 지대추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도 하였다.⁴⁶⁾ 이렇게 운영된 위원회는 경제주체 간에 있게 마련인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으며, 기회주의적 행동(opportunistic behavior)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단기적인 경영전략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조선, 자동차 그리고 전자산업 등과 같이 투자의 회임기간이 긴 중화학공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수 있었다. 이를 두고 국내외 많은 학자들은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협박이나 강요, 그리고 정부에 대한 기업의 뇌물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으나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없다. 시장경제에서는 민간기업이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간의 신뢰관계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즉, 정부가 당근과 채찍이라는 정책을 불편부당하고 일관되게 집행하고 기업이 미래의 보상을 예상하면서 정부정책에 적절히 반응했다고 볼 수 있다.

(2) 정부-국민 관계

그 동안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정부와 경제주체로서의 개인이라 불리는 국민

44) Campos · Root(1996), pp. 89-92 참조.

45) 일본이나 싱가포르의 경우는 대개 법적인 기관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는데, 이는 우연적인 사실이 아니고 공식적이고 법치적인 점을 중시하는 일본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46) Campos · Root(1996), p. 99 참조.

47) 김일곤(1985), pp. 231-232 참조.

사이에는 집단주의 문화에 바탕을 둔 독특한 동원체제를 형성하였다.⁴⁷⁾ 정부는 불균형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한정된 자원을 소수의 산업으로 집중해야 하므로 국민에게 각종 무리한 요구와 희생을 요구하였다.

특정 산업 또는 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국민의 일상활동에 돌아갈 몫을 직·간접적으로 박탈하는 것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기업에 대한 지원을 자금지원과 경영지원으로 나누어 짚어 봄으로써 그 영향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지원되는 자금은 국민의 세금, 해외차입, 그리고 통화증발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기업에게 지원되었던 세금은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비, 교육비 등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외채의 도입이나 통화증발은 인플레이션을 야기시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국민의 실질소득을 낮추고 세금을 높여 생활수준을 저하시켰을 것이다. 또한 은행예금의 대부분이 유리한 조건으로 기업에 지원되는 반면, 국민은 불리한 조건으로 그나마 불충분한 양에 만족해야만 했다. 경영상의 지원은 수출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조치와 국내의 시장영역을 확보해 주는 수입억제조치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수출촉진에 투입된 각종 지원도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원될 것이었다. 수입억제는 국내의 물가를 높이면서 상대적으로 저품질인 국산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으며, 국산품 애용이라는 구호로 국민을 설득하였다.

앞에서 정부의 성공적인 경제활동을 정부의 지도력을 중심으로 논증했으나 사실은 국민의 복종심 없는 지도력이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정부의 산업정책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정부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산업정책을 전면에서 실천하고 수용했던 국민의 태도에서도 찾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순응과 참여는 때로는 자발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부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이 자발성과 강압에 대한 순종은 온정적 위계질서하에서 강력한 지도력과 덕을 바탕으로 한 정부에 대한 신뢰와 권위에서 발생하였다. 정부는 빈곤의 탈피를 갈망하는 국민의 뜻을 파악하고 성장만이 유일한 탈출구이며 한국 경제의 여건상 한정된 자원을 한 곳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에게 성공적으로 설득시켰고 때로는 정부에 의한 강압도 동원하였다. 지도자의 진지함과 공적에 입각한 관료의 등용과 승진은 관료에게 자존심과 자율성을 부여하였고 국민도 이 점 때문에 정부를 신뢰했다고 볼 수 있었다.⁴⁸⁾

48) 이상은 단기지향성의 문화적 특성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나 정부의 능력과 강압이 국민의

(3) 대기업-중소기업 관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중화학공업화로의 진전에 따라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분업을 통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그 사업영역을 전자, 조선, 자동차, 화학 등의 부품산업으로 확대하였다. 그래서 수출창구로서의 대기업은 조립과 가공을 담당하며 중소기업은 이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제공하는 관계, 즉 도급-하도급관계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내부조직은 아니지만 위계질서로 계열화되어,⁴⁹⁾ 한국 경제의 효율성과 성장이라는 면에서 대기업의 선진기술을 여타 부문에 확산시키는 이상적인 효과를 발휘하였다.⁵⁰⁾ 원청기업이 서로간의 약속에 의해 하청기업에게 부품생산이나 특정 투자(firm-specific investment)를 요청·지시할 수 있으므로, 이 관계는 경제거래에서 항상 발생하는 조정문제에서 협조적 조정(cooperative adaptations)을 가능하게 하여 20세기 산업경쟁시대에 경쟁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였다.⁵¹⁾

사실 1970년대까지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부품은 품질관리나 표준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국제규격에 미달하였다.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원청기업들은 부품개발부를 설립하여 경영지원요원들을 육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하도급기업에 경영지도를 하게 하며, 기술요원들을 파견하여 기술지도와 품질검사를 대행했다. 때로는 원청기업의 전문경영인이 퇴직하여 하도급기업의 경영인으로 자리를 옮겨 원청기업의 요구를 해결해 주기도 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하도급기업에 전파하며 새로운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불의 형태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이러한 풍토는 온정적 위계질서 문화에서 서로의 믿음을 바탕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었다.

단기지향적 의사결정을 억제하는 한편 국민은 자식의 교육을 최대 과제로 여기고 이를 위한 여유자금의 마련을 오직 근면에서 찾으려 했다고 볼 수 있다.

49) 조직이론은 도급-하도급관계의 존재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Alchian·Demsetz(1972)는 기업 사이에서 위계질서적 관계가 발생하는 이유로 경제거래를 기술적으로 단계마다 분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찾으며, Williamson(1996)은 경제거래에서 분리불가능한 경우가 많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내부거래가 발생하는 이유를 거래상의 조정이나 분쟁해결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50) "In terms of growth and efficiency, however, Korea's subcontracting system has been an ideal vehicle by which to spread the progressive practices of the modern industrial enterprise to the remainder of the productive economy." Amsden(1989), p. 188 참조.

51) 조정에는 Hayek가 말하는 시장에 의한 자율적 조정(autonomous adaptation)과 Barnard가 말하는 위계조직에 의한 협조적 조정(cooperative adaptation)이 있다. Williamson(1996), pp. 101-102 참조.

VI. 결 론

본 논문은 지난 30여 년간 한국 경제가 이룩한 성과를 간접적 산업정책에서 찾으려는 경제학계의 노력을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경제적 설명을 보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고대 한국 사회에서부터 존재했던 문화적 특성을 미작중심의 농업 때문에 생성된 공동체의식과 무속신앙에서 유래된 신바람 기질로 파악하고, 이것이 새로이 유입된 각종 외래문화를 한국 사회에 토착화시켰다고 보았다. 현대 한국인의 경제문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조선 500년을 지배했던 유교문화인데, 이는 고유문화적 특성의 영향을 받아 한국 사회에서는 극단적인 이상주의로 흐르게 되고 1960년대 이전까지 한국 경제를 지배했다. 이것이 그 동안 한국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부터 한국 경제는 경제중시 사상과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교육내용의 채택과 같은 일부 현실주의적인 요소를 받아들임으로써 독특한 경제문화를 형성하였다. 경제조직의 형태를 규정하는 문화로서는 강성조직과 강한 지도력을 요구하는 문화, 온정적 위계질서 문화로 특징지었으며, 경제조직의 운영을 규정하는 문화로서는 덕치를 중시하는 문화와 모험주의적 문화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행동을 규정하는 문화는 교육중시 문화, 체면중시의 집단주의 문화, 단기지향성 문화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위계질서상의 상위자가 제공한 신뢰가능한 언약(credible commitment)을 형성시켜 간접적 산업정책에서 생기게 마련인 기회주의적 행동과 일반국민의 반발(voice)을 억제하였고, 제약된 합리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였다.

본 논문에서 발견된 결론이 제3의 후진국, 북한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의 미래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향후의 추가적인 연구를 위해 간략히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 저개발국들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위해 간접적인 산업정책을 추구할 경우 자국의 문화적 토양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회주의적 활동의 억제와 반발의 무마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북한은 본 논문에서 체계화한 일곱 가지 문화특성면에서 한국과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력한 지도력의 선호, 온정적 위계질서, 그리고 교육중시 등에서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간접주의적 산업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사회는 1960년대 이전의 한국이 그러하듯이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므로 사리추구의 허용을 통해 성취동기를 유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육내용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난 10여 년간의 한국 경제를 면밀히 들여다 보면 한국인들은 그 동안 추구해 왔던 형태의 간접적 산업정책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간접적 산업정책에서 생기게 마련인 지대배분을 놓고 기회주의적 행동이 빈발하였으며 기업에 제공되는 특혜에 대한 국민적 반발도 거세어졌다. 일곱 가지 문화적 특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부정적인 경향이 현재의 한국 경제에서 전반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산업정책 방향을 진지하게 재검토해 볼 시점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도입할 경우 현대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과의 정합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는 국제사회의 신뢰받는 구성원이 되기 위해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한국인의 경제문화에서 가장 취약한 법규범 준수의 문화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강명헌, 『재벌과 한국경제』, 나남출판, 1996.
2. 권영훈, “분단후 한국경제의 변천: 1945~1961년,” 구본호·이규억 편, 『한국경제의 역사적 조명』, 한국개발연구원, 1991.
3. 김일근, 『유교문화의 질서와 경제』, 매일경제신문사, 1985.
4. 김형효 외 『한국문화의 진단과 21세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5. 루 신, “중국의 유교철학과 그 현대적 역할,” 『유교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pp. 65-77.
6. 마오쥔젠, “유가 인성론의 종합적 고찰과 신인성론의 구상,” 『유교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1994, pp. 249-264.
7. 변형윤, “한국경제의 성장과 변천,” 임원택 외, 『한국경제의 이해』, 비봉출판사, 1987.
8. 신유근, 『한국의 경영』, 박영사, 1992.
9. 이기동, 『사상으로 풀어 보는 한국경제와 일본경제』, 천지, 1994.
10. 이현재, “동아시아의 민족사회의 에토스와 경제문화,” 미출간 논문, 1994.

11. 전택수, “경제발전과 경제문화의 관계에 대한 한 연구,” 『한국의 정치와 경제』, 제11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12. 최봉영, “유교문화권의 교육을 통한 인간의 자본화,” 『유교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1994, pp. 491-513.
13. 한국은행, 『도시가계저축시장조사』, 1991.
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3.
15. _____, 『유교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1994.
16. _____, “한국문화에 있어서 이상주의와 열광주의,” 『형성과 창조』 4, 1997.
17. 한상복,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 『정신문화』 12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18. Amsden, Alice, *Asia's Next Gia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19. Alchian, A. and H. Demsetz, “Production, Information Costs, and Economic Organization,”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62, Dec. 1972, pp. 777-95.
20. Campos, J. E. and H. Root, *The Key to the Asian Miracle*, Washington D. 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6.
21. Casson, M., *Entrepreneurship and Business Culture*, Brookfield: Edward Elgar, 1995.
22. Cho, Lee-Jay, “Ethical and Social Influences of Confucianism,” in Lee-Jay Cho and Yoon Hyung Kim e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Hawaii: East-West Center, 1991.
23. Evans, Peter, *Embedded Autonom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24. Fukuyama, Francis,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The Free Press, 1995.
25. Hofstede, Geert, *Cultures and Organizations*, New York: McGraw-Hill, 1997.
26. Kahn, Herman, *World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1979.

27. Krugman, P.,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Nov/Dec. 1994, pp, 62-78.
28. Lee, C. H., "Culture and Institutions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South Korea," *100 Years of Modernization in Korea*, Academy of Korean Studies, 1996.
29. Lucas, R., "Making a Miracle?" *Econometrica*, 61, No. 2, 1993.
30. Olson, M.,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2.
31. Wade, R., *Governing the Market*,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32. Williamson, Oliver, *The Mechanics of Governa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33. World Bank,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34. Young, A., "Lessons from the East Asian NICs: A Contrarian View," *Europe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May 1994.